

# 쌀 협상과 '고르디온'의 매듭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정**부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9개 나라와 힘겨운 쌀 협상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 의무수입량을 한 톨도 더 늘려주지 않고, 관세화유예를 관철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 우리가 서명한 WTO부속서에는 관세화유예를 하려면, “현재의 수입불량에 추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허”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칼자루를 상대방이 잡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협상 상대국은 관세화원칙을 내세우며 자기의 국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심지어 쌀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 나라까지 협상을 하자고 요청한 상태이다. 아마도 쌀 이외에서 뭔가를 좀 챙기지는 속셈일 것이다. 우리가 관세화유예를 원하면 원할수록 상대방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관세화유예를 최대한 추진하되, 상대방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면 협상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관세화를 하겠다고 한다. 관세화유예의 대가가 관세화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관세화가 대안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협상카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다 관세화유예의 요구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 관세화로 갈 것인지, 관세화를 하면 어느 정도 쌀이 수입될지, 그것이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제대로 판단을 했다하더라

도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관세화유예에 성공”했을 때도 그 대가가 적정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상대방은, 현재 '86~'88수요량의 4%인 의무수입량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다. 의무수입량은 한번 늘어나면, 유예가 끝나 관세화를 하더라도 그 물량은 계속해서 수입해야 한다. 만약 관세화유예에 집착하여 ‘유예의 기간은 짧게 하면서, 의무수입량은 크게 늘려 놓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의무수입량만 그대로 계속되고, 나머지는 이미 DDA협상에서 정해진 대로 관세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의 쌀 소비량이 매년 3~4%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무수입량이 주는 부담은 심각해질 수 있다. 다만, 수입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북한에다 마음대로 줄 수 있다면, 재고부담의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다. 따라서 관세화유예를 하더라도 몇 년을 유예받느냐, 그리고 DDA협상에서 정해진 의무수입량에 비해 얼마나 많이 양보했느냐에 따라 협상의 성공여부가 달라진다. 쌀 협상의 성공여부는 DDA협상이 끝나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여 관세화를 하려고 한다면, 관세화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관세화를 하면,

의무수입량은 일단 현재의 4%에서 출발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DDA협상결과에 달렸다. 새로운 협상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G20수출개도국들은 관세상한제를 도입하되, 소위 민감한 품목은 상한제에서 예외로 하고, 대신에 의무수입량을 늘리자고 한다. 따라서 의무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한제에서 제외한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쌀의 총수입량이 달라진다. 또한, 관세감축이 되는 정도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되느냐, 개도국으로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국제 쌀값에 따라 수입물량이 달라진다. 현재 국제 쌀 재고는 감소하고, 쌀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환율에 따라서도 수입량이 달라진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져서 환율이 내려가면 똑같은 국제가격과 관세율에서도 국내가격이 싸져서 수입이 늘어난다. 모든 요소가 불확실한데 관세화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겠는가!

최선의 협상결과는 유예기간을 길게 하면서 의무수입량을 적게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상대국은 유예기간을 짧게 하면서, 의무수입량을 늘리자고 할 것이다. 어느 수준에서 관세화를 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세화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대량의 쌀이 수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몇 년 동안에는 관세도 비교적 높은 데다 시장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농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자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화수입을 두고, 농민들과 옥신각신하다보면 몇 년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르디온의 매듭’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쌀 협상을 누가 풀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풀 수 없게 얽힌 ‘고르디온’ 신전 기둥에 매인 마차의 매듭.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는 전설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고자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가다가 ‘고르디온’ 신전에 들려 신전기둥에 매인 마차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매듭을 풀고는 고대 오리엔트

를 통일했다고 한다. ‘고르디온의 매듭’ 이야기는 복잡한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오히려 쉽게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에게 사활이 걸린 쌀 협상문제를 ‘힘도 없는’ 협상팀과 불확실한 미래에만 맡기고 있을 수 없다.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 첫 번째 답은 “수입쌀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수입쌀을 하역하는 항운노조와 협력하여 수입쌀을 하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창고사업자들에게는 수입쌀을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도정사업자들에게는 수입쌀을 도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운수사업자에게는 수입쌀을 수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매장에서 수입쌀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소비자단체에게 수입쌀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건 수입쌀이 ‘자유롭게’ 수입되지는 않도록 하지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관세화의 가치’는 달라지고, 협상의 대가도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답은, 농민들이 관세화로 잃게 되는 소득을 소비자들이 되돌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관세화 되어 쌀 수입이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고, 농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들 중에 농민들의 소득을 뺏어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 금액만큼을 농민들에게 돌려준다면 농민들도 관세화가 되건 관세화유예가 되건 크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관세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지 않고는 쌀 협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무조건 쌀 한 톨 늘리지 않고 관세화유예를 하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 모두가 쌀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민들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행동을 같이 해 줄때 쌀 협상의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대외협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소비자와 농민들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농연**